

무책임한 대구시교육청 간부

대구 O고 교사의 과잉체벌로 교육계가 들끓는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구교육정책의 실무를 책임진 교육청 간부의 발언이 대구 교단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장동만 대구시교육청 교육정책 국장은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체벌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인권위원회와 협의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영남일보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아무리 교사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조치는 너무하다” “이 보도가 사실이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의 반발은 예상된 바였다.

전교조는 “학생체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장 국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온종일 뒤송송했다. 과문이 예상 외로 커지자, 장 국장은 18일 오후 “시의원들의 추궁에 마지 못해 사건을 말한 것”이라거나 “전면조사가 아니라 관련제보가 접수되면 조사한다는 의미”라며, 전날 자신의 말을 뒤집는 해명에 급급했다.

이는 교육청의 검토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한 발표임을 인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교육청 정책



윤철희기자
1사회부

국장이란 직책이 그런 가벼운 자리인가.

대구시내 45만명의 학생과 2만여명의 교원, 수십만의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핵심직책이 교육청의 정책국장 자리다. 그런 교육정책국장이 곤란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교사들의 정신질환 감정을 발표하고, 문제가 되자 뒤집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교육과 교단의 추락한 신뢰, 대구교육에 대한 기대로 가득찬 학부모들의 믿음마저 잃는다면 그 손실은 누가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교사와 교육을 함부로 얘기하고, 하루 만에 발언을 뒤집는 교육청 간부의 정신건강은 온전한 것인가.